

“부동산 조정대상지, 읍면동 세부 평가 필요”

민주 김윤덕 의원,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대도시 타겟 정책, 중소도시 현실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시 갑)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김부겸)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 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노형욱)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여력이 높아 청약요구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



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대상지를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이제 지난 1월 법이 개정돼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을 지적했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

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 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건의사업 추가반영을”

도의회 의원들, 오늘
국토부에 촉구 방침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대해 정부(국토부)를 상대로 전북도 건의사업의 추가(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최영일, 황영석 부의장과 이정민 문화건설안전위원장(10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국토부를 방문)에 황성규 제2차관(장관 대행)을 면담하고, 도의회(문화건설안전위원회) 차원의 추가사업을 건의한다.
이날, 도의회가 정부(국토부)에 건의한 전북도 사업은 ▲전주~김천(101.1km) 2조3,894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11.4km) 4,163억원, ▲새만금~목포(151.6km) 2조9,828억원,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km) 4조850억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국토부 제2차관 면담에 이어 국토부 정문 앞에서 의장단·상임위원단 및 문건위원들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한다. /유호상 기자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재판 커진다

이상직 의원 추가 기소 병합

555억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부(김부겸) 자신의 조카 A(42)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5월 18일)에 따라 다음 주 좁은 기소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병합 신청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유지해달라는 검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고인 신병이 왜 확보해야 하는지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은 “현재 이 의원 추가 기소를 하고 있는데 법행을 여전히 부인하며 대질시키려라 사람들이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 A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이 거의 핵심적인 주요 증거 중 하나인데 이 의원이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점에 비추볼 때 불가피하게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현재 피고인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변호인의 어떠한 노력도 받지 못한 채”라며 “변호인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는데 이 의원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증거에 대한 신빙성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카드 내역 등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 점 참작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주 정도에 이상직이 기소되면 변론 준비에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직 첫 기일이 잡히면 준비기일을 정해서 사건을 병합한 뒤 증인신문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에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매도해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2019년에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다. /유호상 기자



“소외계층을 위해 써주세요”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운섭)가 지난 7일, 기정의 달을 맞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한우곰탕 600세트(3백만원 상당)를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정운섭 회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원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물품은 도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공식 행보 재개’ 이낙연, 오늘 신복지 구상 발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
지난 4일부터 본격 대권 행보
지지를 끌어올리기 ‘박차’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을 공식 출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연대와 공생 첫 정책 심포지움에서 자신의 신(新)복지체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연대와 공생은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로, 학계·전문가·정책 고위공직자 그룹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한달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민심을 살펴 온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첫 정책 심포지움은 그간 싱크탱크가 논의해온 국가 및 경제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전 대표가 민심 청취를 통해 느꼈던 자신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연대와 공생 첫 정책 심포지움에서 자신의 신(新)복지체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도 전한 계획이다.
연대와 공생 측은 “이번 심포지움 목적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전환 국면에서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책임국가를 제시하고, 동시에 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추격의 시대에서 ‘주월’의 시대로 가기 위한

“5·18 관련 법안 적극 협력할 것”

국힘 신임지도부, 민주모지 참여 후 대표자 간담회서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지도부는 첫 지역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국민의힘 신임지도부는 지난 7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양석 사무총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재익 호남동행 국회의원, 전주에 원내대변인과 김영훈 회장(5·18민주유공자유족회), 문홍식 회장(5·18구속부상자회), 임종수 위원장(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조정수당 관련법, 5·18보상법 등 5·18관련 현안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를 잘 치유하고 민주영령들의 뜻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역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동서통합을 넘어 대

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까지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5718 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방단체 설립법을 통과시켰고 형제자매에게 공방단체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5·18단체분들과 소통하면서 5월 국회에서 5·18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5·18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월단체의 공방단체 설립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국민의힘 정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의 주도로 5·18회생자의 방계가족(형제, 자매)에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 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유족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5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호상 기자

학교 공간 혁신 필요

김정수 도의원, 이리계문초
낙후 문제 해결 위해 현장방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익산2)이 이리계문초등학교의 낙후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비효율적 공간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난 7일 방문했다.
이날 학교 현장에는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과 도교육청 심환무 시설과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특별실과 부속시설을 이용하는데 공간이 나눠져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게는 특별활동을 위해 외부로 돌아오는 동선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리계문초 임상호 교장은 “현재, 공간이 부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학교 내 공간 재구조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정수 부위원장은 “공통통학로로 인근 과밀지역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고 있는 이리계문초에 낙후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며 “작은 학교 학생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개축 수준의 리모델링으로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이 이리계문초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들에 더욱 세밀한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